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2020. 11. 26.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추진 배경	1
II. 평가	2
III. 추진전략	6
1. 지역주력산업 개편	7
2.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11
3.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14
4. 지역균형 뉴딜 촉진 거버넌스 구축	17
IV. 향후 추진계획	20

I. 추진 배경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20.7.14)'의 확산 및 국민체감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대부분의 한국판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지방재원 등을 활용한 자체 뉴딜계획**도 발표

*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160조원) 중 실질적 지역사업 규모는 75.3조원 수준(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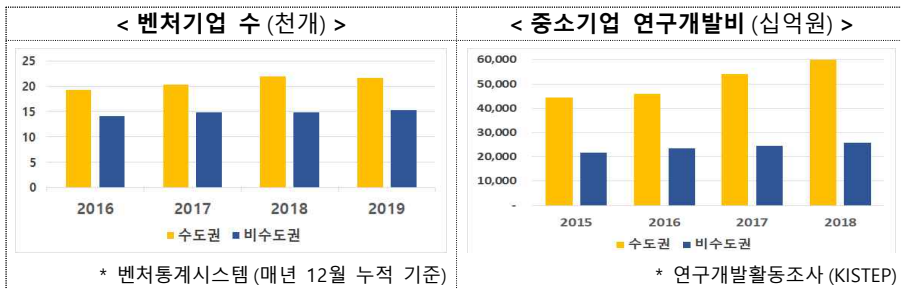
** 지역별 자체 뉴딜계획 : 강원형 뉴딜(20.10), 새경북 7+3 뉴딜 프로젝트(20.6), 대전형 뉴딜 기본계획(20.7), 광주형 AI-그린뉴딜 계획(20.7) 등 광역지자체 13곳 발표

○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

* 지역균형 뉴딜 개념 : ①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②지자체가 자체재원 등을 활용하거나 ③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추진하는 사업(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20.10)

□ **(지역균형 뉴딜과 중소·벤처기업)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핵심 주체는 지역의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

II. 평가

1. 지역산업·기업 육성정책 발전경과

◇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지역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추진

□ **(국민의 정부) 지역산업 육성정책 시범 추진**

○ 부산(신발)·경남(기계)·광주(光)·대구(섬유) 등 4개 산업 지정으로 최초의 클러스터형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 **(참여정부) 지역산업 육성정책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균특법 제정, 균특회계 신설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확대*하여 추진

* (기초) 지역특화사업 신규도입, (광역) 지역전략산업 4개 → 13개 시·도

□ **(이명박 정부) 광역경제권 개념 도입**

○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광역경제권(5+2) 선도사업과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남북교류·접경) 협력사업 등 추진

□ **(박근혜 정부) 주민체감형 지역산업 지원**

○ 실제 주민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시·군/시·도 간 협력하는 지역 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업 지원

□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2.0 + 지역균형 뉴딜**

○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중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균형 뉴딜 제시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혁신도시 등

○ 세계 최초 지역단위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도입('19) 하였으며, 시·도별 대표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육성중

* (기초) 시군구 연고산업, (광역) 지역주력산업(비수도권 14개 시·도 48개 산업)

2. 주요정책 현황 및 평가

1 (지역산업·기업)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육성

- (현황)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정부는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R&D 및 사업화 지원*으로 집중육성 중
 -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0년 2,100억원)
- 現 지역주력산업은 제조업 기반 융·복합산업 (제조+ICT/서비스)으로, 지난 ‘18년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총 48개 산업*을 선정
 - * 산업 분포 (총 48개) : 바이오·의약식품부티 (13개), 기계소재·전기전자·화학·세라믹 (25개), 정보통신서비스 (4개), 에너지·환경 (6개)

< 시·도별 주력산업 현황 >

지역	지역주력산업	지역	지역주력산업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성과) 지역을 대표하는 육성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고용증가** 등 성과창출
 - * 부산 - 블록체인 (주력 : 지능정보서비스), 충북 - 바이오 (주력 : 바이오헬스) 등
 - ** 6,717개 주력산업 기업이 4,895명 고용 및 7,424억원 매출 창출 (‘18~‘19)

⇒ (보완할 점) 코로나 19 및 지역균형 뉴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최근 지역의 수요변화가 지역주력산업에 반영될 필요

2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기업지원 연계

- (현황) 규제자유특구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초지자체) 등 지역단위 규제특례 제도 운영중
 - 규제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지역특화특구** 지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
 - * 24개소,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 ** 195개소, 메뉴판식 규제특례 (128개)
- (성과) 특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
 - 규제특구 내 공장설립 (3,169억원) 및 VC 투자 (552억원), 일자리 창출 (1년간 662명), 기업 추가이전 (109개사) 등
 - * [경북] 00건설 1천억원 공장설립, [부산] C사 (블록체인 전문업체) 75억원 투자유치 등
 - 지역특화특구 입주기업 7천개의 매출·고용도 증가* 추세
 - *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 고용현황 (만명) : (‘17) 7.17 → (‘18) 8.46 → (‘19) 8.57
매출현황 (조원) : (‘17) 13.4 → (‘18) 14.2 → (‘19) 18.3

3 (창업·벤처) 창업기업 거점 조성 및 지방기업펀드 운영

- (현황) 정부의 창업·벤처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기업펀드 조성·운영 (‘20년 880억원)
 - * 판교2밸리 창업존 (‘17), 대전 팁스타운 (‘18.10), 인천 스타트업 파크 (‘20.9), 메이커스페이스 (‘19. 비수도권 23개) 등
- (성과)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확대*, 지역 VC 증가 등 지역투자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의 혁신활동가도 등장
 - *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 : (‘15) 13.7 → (‘16) 17.9 → (‘17) 16.1 → (‘19) 18.5

⇒ (보완할 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역주력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기업 (leading company)을 육성할 필요

- * 국내 유니콘 기업 11개 중 지역기반 기업은 1개에 불과 (쏘카-제주)

<참고>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주력산업

- (지역균형 뉴딜 개념*)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
 -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개념 수립 (20.10, 관계부처 합동)
 - 한국판 뉴딜 사업(총 160조원) 中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귀착되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전국 단위 ‘안전망 강화사업’은 제외)
 - 지자체가 자체재원·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주력산업) 지역별 ‘지역균형 뉴딜 대표과제’*와 관련된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에 포함하여 집중지원하는 개념
 - * 지역이 추진하는 다수의 지역균형 뉴딜과제 중에서 지자체가 직접 결정

<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주력산업 개념도 >



<추진 방향>

- ①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정책·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
- ② **지역주력산업**이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아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정책을 연계·뒷받침**

Ⅲ. 추진전략

“지역혁신 중소기업 주도 지역균형 뉴딜”

[산업] 48개 지역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육성 (‘21~’25)

[거점]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25, 시·도별 1개 이상)

[일자리] 일자리 8만개 창출 (‘21~’25)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 [디지털] 20개 산업
- 기계·바이오+ICT 융합

◇ [그린] 19개 산업
- 재생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등

◇ [고부가가치화] 9개 산업
- 디스플레이, 섬유 등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 ◆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 지역주력산업 기업 전방위 지원
 - R&D 및 사업화 자금 1.4조원 (‘~’25)
 - 자금·판로·인력 등 지원사업 연계
- ◆ 지역혁신 선도기업 발굴·육성
 - R&D 및 사업화 자금 집중지원 (기업당 10억원)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 ◆ 지역단위 규제특례 제도 실효성 제고
 -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균형 뉴딜 연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확대
- ◆ 지역별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 민관협력 스마트 혁신지구

지역균형 뉴딜 촉진 거버넌스 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TP 연계 강화

◆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1. 지역주력산업 개편

(1) 의의와 방향 : 지역 주도 + 지역균형 뉴딜 연계

1 (의의) 지역별 대표 뉴딜산업 선정 → 지역균형 뉴딜 청사진 마련

-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전략을 구체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
- 금번 개편을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산업과 향후 5년간(~'25년)의 중점 육성 분야를 명확히 제시

2 (방향) 디지털·그린뉴딜 중심 +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특성 반영

- (지역균형 뉴딜 연계) 한국판 뉴딜과 직접 관련되거나,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디지털·그린 뉴딜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 (규제자유특구 연계) 규제특구가 신산업 육성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특구의 전·후방 산업과 신규 특구지정을 계획중인 산업
- (지역별 전략육성 수요 반영) '18년 지역주력산업 선정 이후의 산업 여건 및 가치사슬 변화 등에 따른 전략적 육성수요가 있는 산업

3 (방식) 지자체 주도 개편(안) 마련 + 정부는 이를 뒷받침

- (지자체) 14개 시·도가 지역 내 산업·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성장전략(지역균형 뉴딜 등)에 적합한 지역주력산업 제시
- (중기부) 개편방향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별 주력산업의 특화방향 및 지역간 중복성 조정 등 지원

◇ 주요경과 : 지역별 현황분석 및 개편 수요조사(20.8~9월) → 14개 시도 합동 워크숍(2회) 및 전문가 컨설팅(10~11월) →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마련(11월말)

◇ 향후계획 : 지역경제위원회(중기부 차관, 시·도 부단체장) 개최 및 확정(12월말)

(2) 개편 결과 : 총 48개 지역주력산업 선정

◇ ①지역균형 뉴딜 연계, ②규제자유특구 연계, ③지역별 전략육성 수요 반영 기준에 따라 14개 시·도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 전체규모는 현재 수준(48개)으로 유지하되, 기존 산업의 대체 또는 영역확장* 등 방식으로 개편

* (대체) 산업 자체를 변경, (확장) 산업은 유지하되, 산업 내 집중육성 분야를 확대

1 [지역균형뉴딜 연계] 16개 산업 개편

- 시·도별 1개 이상의 지역균형 뉴딜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대체(2개) 및 확장(14개)

개편방식	지역	기존	개편
산업대체	세종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지역뉴딜)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확장	대구	분산형 에너지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심	(지역뉴딜) 스마트에너지자립도시 (분야) 에너지저장기술 포함

2 [규제자유특구 연계] 18개 산업 개편

- 현재까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기준으로 특구 전후방산업을 기존 산업의 대체(1개) 및 확장(17개)

개편방식	지역	기존	개편
산업대체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ICT융합헬스
			(규제특구)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확장	전북	탄소복합소재	탄소복합소재
		(분야) 탄소섬유 중심	(규제특구) 탄소융복합 (분야) 선박, 수소용기 소재 등 포함

3 [지역별 전략육성 수요 반영] 14개 산업 개편

- 지역의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되, 지역 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사업 확장(14개)

개편방식	지역	기존	개편
산업확장	부산	바이오메디컬	라이프케어
		(분야) 헬스케어, 건강식품 등	(분야) 비대면 의료서비스 포함
산업확장	충남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디스플레이
		(분야) LCD 중심	(분야) Flexible OLED, QNED 등 포함

[3] 개편의 의미 : 디지털 (20개) + 그린 (19개) + 고부가가치화 (9개)

1 (디지털) 20개 산업, 96개 핵심품목

- 기계, 바이오 등 업종을 중심으로 ICT (5G·빅데이터·AI) 기술을 융합하여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블록체인 활용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마련
 - * 지능정보서비스(부산), ICT융합헬스(강원), 지능형로봇(대전), 스마트시티(세종), 지능형IT부품(충북) 등
 - ※ 프로토콜 경제 :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하여 탈중앙화·탈독점화 및 합의된 규칙 정립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

2 (그린) 19개 산업, 95개 핵심품목

- 에너지 (이차전지 포함), 자동차 등 업종을 저탄소·친환경 분야로 확장 또는 개편하여 그린 경제로의 가속화 도모
 -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전남), 그린모빌리티(울산), 고효율에너지시스템(대구), 향노화메디컬(경남), 그린에너지(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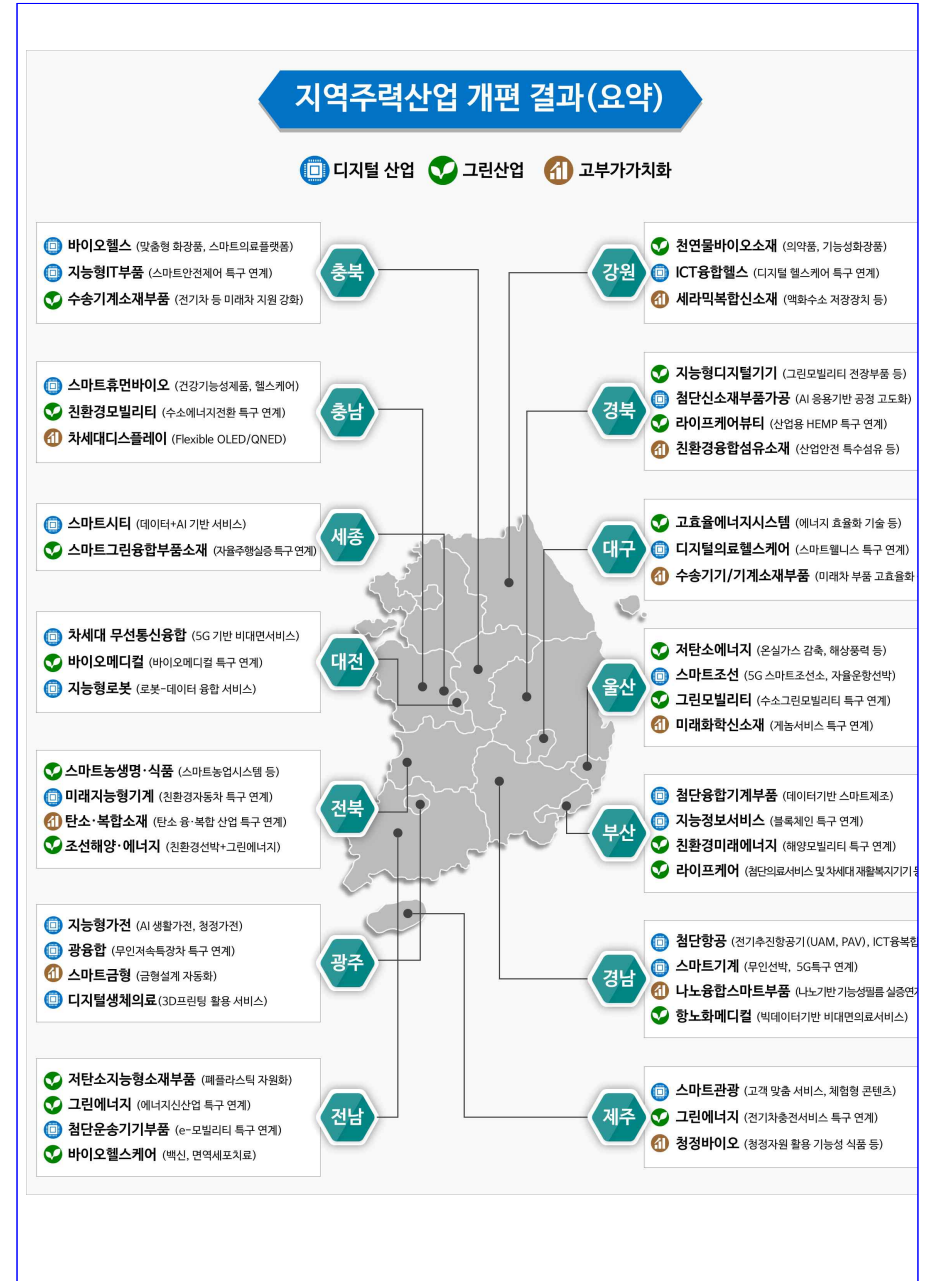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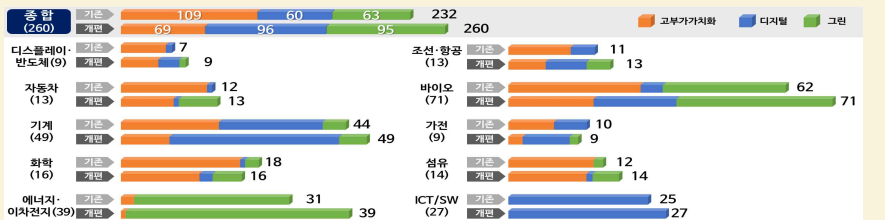
3 (고부가가치화) 9개 산업, 69개 핵심품목

- 지역 내외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기존 산업기반 (주요기업 분포·인프라 등)의 경쟁력 강화
 - * 차세대디스플레이(충남), 친환경융합섬유소재(경북), 탄소·복합소재(전북), 스마트금형(광주) 등

<참고> 업종별 개편 전·후 핵심품목 분석 결과

◇ 금번 개편에 따라 전체 핵심품목은 232개 → 260개로 증가

- [디지털 뉴딜] 60% 증가 (60 → 96개), [그린 뉴딜] 51% 증가 (63 → 95개), [기반산업] 37% 감소 (109 → 69개)하였으나, 고부가가치화 추진
 - * (디지털) 비대면의료서비스, 블록체인 기술기반 보안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등 (그린) 전기자동차부품, 에너지저장장치부품, 풍력발전시스템 성능평가 서비스 등 (기반산업 고부가가치화) 산업용섬유소재, 반도체융합부품, 첨단디스플레이부품소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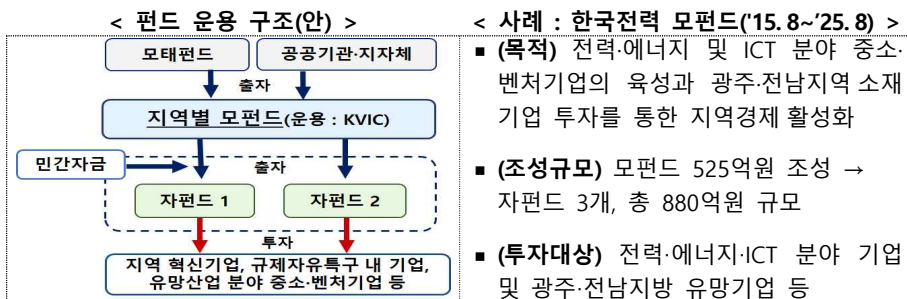
2.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 ◇ 민간·지역 공공기관 등이 자율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 R&D·자금·판로·인력 등 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
- ◇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우수기업을 지자체 주도로 발굴 및 집중 지원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 (~'25년, 100개사)

(1)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① (조성·운용방안) 민간·지역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 투자 여력이 있는 지역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의 자율참여*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 기본재산·수익 등 여유자금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운용수익 확대 차원에서 자율참여
-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 조성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지역에 시범 조성 후 권역별 확대를 검토
- 권역별 모펀드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하고,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 출자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위배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
 - **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 ② (투자촉진) 지역혁신기업 및 규제자유특구 IR을 개최하여 비수도권 기업들이 투자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벤처투자 확대 촉진

(2) 지역주력산업 기업 전방위 지원

① (R&D 및 사업화) 정부·지자체가 지역주력산업에 1.4조원 지원

- 정부·지자체가 매칭 (7:3) 방식으로 지역주력산업에 향후 5년간 ('21~'25) 총 1.4조원 규모로 투자
 - * [R&D] 0.8조원 (지역특화산업육성+ R&D : 국비 0.56, 지방비 0.24) [사업화] 0.6조원 (지역특화산업육성 : 국비 0.42, 지방비 0.18)
-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을 배분하고, 지자체가 지원목표·방식을 직접 설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② (보증·융자) 지역균형 뉴딜 전용자금 신설·확대

- (보증) 지자체가 지역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일정금액을 출연하는 '지역뉴딜 협약보증' 확대** ('21년, 기보)
 - * 대구 사례 : 대구시가 기보에 50억원 출연 → 코로나 극복 전용 보증공급 1천억원 협약
 - ** 기존 지자체 협약상품을 우대지원하거나, 신규 지자체와의 특별출연 협약 추진
- (융자) 지역주력산업 기업의 뉴딜과제 지원을 위한 전용 융자자금 운용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일부를 주력산업 기업에 별도배정 등 우대

③ (수출·판로)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수출지원사업 연계

- '공공기관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시제'* 도입으로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유망 지역중소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촉진
 - * 시도지사가 지역 내 공공기관(이전공공기관 제외)과 협의하여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구매계획·실적을 공고
 - ※ 전남 시행사례 : 전체 중소기업 제품 중 도내기업 제품비중이 '14년 71% → '19년 86%로 증가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을 우선발굴하고, 메뉴판식 해외 마케팅 서비스** 제공 ('21~)
 - * 해외마케팅, 지자체 프로그램 연계, R&D 사업 우대 등 지원 (매년 200개사)
 - ** 수출바우처 ('20년 1,407억원) : 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디자인 개발·홍보·바이어 발굴·전시회·인증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자율이용

4 (인력) 특화교육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분야 인재양성

- 중소기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으로 지역주력산업 관련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중소기업연수원 특화과정** 신설
 - * (기존) 지역주력산업 연계 없음 → (개편) 중소기업-지자체 컨소시엄으로 연계 강화
 - ** 중소기업연수원 내 AI 특화과정 도입, 로봇·드론 특화 스마트공장 배움터 운영 등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력산업 관련 훈련과정을 수요조사(수시)·신설하고, 폴리텍 캠퍼스**를 통해 인재 양성(고용부 협업)
 - * 전국 시·도(17개)의 지역 고용·인력양성 거버넌스(중앙·지방정부, 지역노사단체 등 참여)
 - ** 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창원구미 등), 반도체융합캠퍼스(안성), 항공MRO특화캠퍼스(인천) 등

(3) 지역혁신 선도기업 발굴·육성 (~'25, 100개)

1 (지원대상)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우수기업 100개 (~'22년)

- 지자체 스타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자 등 지역의 유망기업 중 시·도 주도로 집중육성 기업을 발굴
 - * 고용·수출·매출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선정 → 중기부가 R&D 등 지원 중
- '21~'22년 총 100개 기업, 14개 시·도별 7개 내외 기업 선정

2 (지원내용) 기존 R&D 및 사업화 자금 + α (~'25년)

- 정부·지자체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3년간 10억원 이내 패키지로 지원*하고, 자금(융자·보증 등) 후속지원 추진
 - * R&D 7억원, 사업화 2억원 + 마케팅·인력·자금 등

3 (선정절차) 전문가 평가 + 지역혁신주체 참여

- 정부가 지역주력산업과의 연관성, 매출·수출액 수준 등 평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도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직접 선정
- 지역기업 및 주민이 기업추천·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유망기업을 선정

3.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 ◇ 뉴딜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및 실증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추가 등 내실화
- ◇ 그린·디지털 중심의 지역별 창업·중소기업 거점 조성 ('21년 5개소)

(1) 지역단위 규제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

1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균형 뉴딜 연계

- (신규지정) 정부가 사업 분야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을 기존 Bottom-up 방식과 병행,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
 - * 4차 지정('20.11) 결과 : [디지털] 5G 활용 스마트 공장(경남), 자율주행(세종, 사업추가) [그린] ESS 발전(광주), 이산화탄소 자원화(울산)
- (1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분야 선정시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개편되는 시·도별 주력산업 현황을 고려('21~)
- (2 뉴딜과제 연계형) 저탄소·친환경 분야의 탄소중립특구 지정 확대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 수행
- (기업지원) 실증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김 없이 지원
 - * [투자]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20년 약 350억원), [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20년 2,100억원) 등 기존사업 연계, [수출] 수출바우처 등

<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패키지(안) >



○ (제도정비) 실증특례 허용 범위 확대 및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규제불분명을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하여 특례허용 강화

* (현행) 사업허가 기준 등이 ① 없거나, ② 적용이 어렵거나, ③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불가능한 경우 실증특례 신청 가능 → (개선) 허가기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

- 규제법령 정비 촉진을 위해 특례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요청제*'를 법제화 (사업자 신청)하고, 법령정비 전 임시허가** 전환 근거 신설

* (사업자) 법령정비 요청 → (주관-규제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및 정비추진 → 주관-규제부처 이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신제품 및 신서비스 등의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 전 임시로 허가 부여

- 개별 법률에서 규제특구제도를 활용토록 한 경우 패스트 트랙을 허용*하여 지정절차 간소화

* 해당 법률 공고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경우 생략 가능

○ (성과점검) 현장점검 (수시, 온라인-현장 병행) 및 성과평가*를 통해 실증사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질적 성과창출을 뒷받침

*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중진공)하고, 특구점검 전담조직 및 기능 보강

② (지역특화발전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및 제도 정비

○ (규제특례 확대·활용) 지자체 및 기업 대상 정기·수시 수요조사를 통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추가 발굴* (現 58개법 128개)

* 관광특구 허가 의제 적용(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시), 접경지역 가공식품의 군부대 납품 허용 등

- 지방청이 지역특구 (특화사업자)를 1:1 밀착관리하고, 특례 활용 컨설팅 및 신규특례 수요발굴 (매년) 추진

○ (제도 정비) 신규지정 특구는 졸업제를 도입 (예: 5년)하고, 기존 특구는 지정해제 사유를 정비하여 내실화 (지역특구법 개정, '21)

* 지정해제 사유 : (기존) 법령위반, 특례 부작용 등 → (추가) 기간 만료, 관리부실 등

- 졸업 이후 영구적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규제개선 추진

[2] 지역별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① (창업) 디지털·그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집적지 조성 ('21년 3개소)

○ (그린 스타트업 타운) 도심에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복합창업공간 (랜드마크)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 등과 연계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전력의 상시분석 및 최적화, 녹지확대 등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관사업*을 연계하여 창업기업 성장의 시너지 제고

* 천안 사례 : 강소연구개발특구 (차세대차동차부품), 지역주력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 규제자유특구 (수소에너지) 등 연계 → 친환경 미래차 스타트업 육성 예정

○ (스타트업 파크) 지역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공동활용시설 등을 구축하여 선배기업·대학·연구소 등과 개방형 혁신 촉진

※ 인천 사례 : 민간 (신한금융 및 셀트리온)과 협업하여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육성
대전 사례 : 지역대학·연구소 (카이스트 등) 자원을 활용하여 AI 분야 창업기업 육성

② (중소)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스마트 혁신지구로 전환 ('21년 2개소)

○ (H/W) 공업지역 등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중소기업 공동 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투자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제조 스마트화 공동 플랫폼 (테스트베드 등), 스마트 공동물류, 공동 친환경 인프라 등

- 상업·편의시설 구축, 도로정비 등 인근지역 인프라 개선은 공업 지역 활성화 제도* (국토부) 등을 연계하여 지자체·민간 자본 활용

* 도심 인근 공업지역에 상업·문화·주거 등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

○ (S/W) 플랫폼 운영·관리 권한을 선배기업 등 민간에 위임하고, 민간은 자체적으로 후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마련·운영

- 해당 지역을 창업 관련 지역특구로 우선지정하여 선택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연계

4. 지역균형뉴딜 촉진 거버넌스 구축

- ◇ **창경센터 - 테크노파크** 간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에서 지역앵커 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 **중앙 -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 협력 강화 등 추진**

(1) 창업과 성장을 연결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별 역량을 활용·연계, 지역혁신 스타트업 육성

- (추진체계) 19개 센터별 특화 분야를 활용하여 민간(대기업 등),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 (지역창업 활성화) 사업화·투자유치 등 집중지원 → 혁신 스타트업 육성
 -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각종 보육,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혁신창업 자원을 결집시키는 플랫폼 역할 수행
 - *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의 투자기능을 강화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투자 및 VC 투자연계 추진(자체펀드 14개 115억원 조성, '20.9월)
- (지역특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센터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대기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지원 고도화 ('21년 본격 추진)

< 창경센터 협업 프로젝트 '20년 시범사업 내용 >

분야	내용	참여기관
5G	<ul style="list-style-type: none"> XR, 원격머신, 자율주행, 물류 등 분야 BM 개발 (참여센터) 대전·경기·세종·인천 	SKT, KT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전통산업에 스타트업 매칭 (참여센터) 광주·전북·충남·서울 	MS, GIST
제조·서비스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중소기업간 팀빌딩으로 제조업에 서비스 융합 (참여센터) 경북·대구 	삼성
제조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스타트업의 대·중견기업 대상 기술·투자 로드쇼 지원 (참여센터) 부산·울산·경남·포항·빛가람 	포스코, 두산, 롯데
농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스타트업의 패키징·브랜딩 등 고급화 지원 (참여 센터) 전남·강원·제주 	GS, 네이버, 농협 등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스타트업과 글로벌 제약사 간 파트너십 지원 (참여센터) 충북 	Informa Connect

② (테크노파크) 지역혁신 스타트업을 지역앵커기업으로 성장 지원

- (추진체계) 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지역 산학연과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성
 - * 테크노파크, 창경센터, 지역 대학 및 출연연 등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주기업 및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공동으로 해결(인력, 장비 등 지원)
- (지원내용) 창경센터를 통해 보육된 창업기업에 대해 테크노파크의 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기술지원으로 성장 촉진
 - 창경센터 보육기업이 테크노 파크 입주*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 입주기간 (7년), 現 TP 입주기업 2,100개사 (매년 120개사 교체)
 - 테크노파크 내 특화센터(53개) 장비·인력을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맞게 고도화 (노후장비 교체 등)하여 기업 활용도 제고, 사업화 촉진
 - * 전체 2,789대 중 10년 이상 노후장비 1,505대(54%) 교체로드맵 수립 추진
 - 지역별 기술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기술닥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1:1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 * 경기 사례 : 경기 TP를 통해 6,670개 중소기업에 8,500건 기술애로 해결 ('09~'19)

③ (데이터 플랫폼)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DB 구축

- (내용) 지자체 - 테크노파크와 함께 산업경제, 지역기업, 사업·성과, 혁신자원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연계**
 - * 지역경기 동향, 지역주력산업 기업 현황·지원성과, 지역별 인력·장비 현황 등
 - ** 공공통계포털 (통계청, 한국은행 등), 사업관리시스템 (NTIS, K-PASS, RIPS)과의 API 연동, 테크노파크 및 지자체 자체 DB 등 활용
- (활용) 산업·기업정보 분석을 통한 지원사업 매칭, 신규 정책과제 발굴, 지역기업에 대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등
 - * 부산 사례 : 100대 지역주력산업 기업 DB 관리 → 성장 유망기업군 모니터링 및 정책대응

[2]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①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지역중소기업 정책 총괄

- 시·도 주도로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평가 등 지역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등 역할

* (위원장) 중기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지사, 전문가 등 30인 이내

< 지역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안)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small>(위원장 : 중기부장관)</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참여 ■ 지역경제위원회 : 시·도 부단체장 참여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 지역집행기관 (중진공·기보 등), TP·창경센터 등 참여
지역경제위원회 <small>(위원장 : 중기부차관)</small>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small>(위원장 : 지방중기청장)</small>	

-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청·지역혁신기관의 보유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연계과제*를 발굴·추진

* 연계과제(안) : [광주] 광주전남지방청 舊청사 활용 AI 스타트업 육성(주력: 지능형가전)
 [충북]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주력: 바이오헬스) 등

② (지역경제위원회) 지역주력산업 육성전략 심의 및 성과평가

- ①지역주력산업 육성전략(지역산업진흥계획) 및 ②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지자체 참여 유도 및 성과 촉진

* 평가지표 例 : [육성전략] 지역균형 뉴딜과의 정합성, 전략의 타당성·구체성 등
 [사업성과] 사업의 계량성과(매출·고용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노력 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차등지원하여 실효성 제고

< 지역주력산업 인센티브 체계 개편(안) >

	현행	개편
인센티브 예산	총 95억원 (사업비 5%)	95억원 + 95억원 (총 190억원)
평가요소	사업성과	사업성과 + 육성전략
평가등급	3가지 등급 (S, A, B)	6가지 등급 (SS ~ BB)
차등지원	지역별 최대 12억원 차이	지역별 최대 24억원 차이

IV. 향후 추진계획

- ◇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를 지역중소기업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별과제 추진 및 제도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① 후속 세부계획 수립 및 발표

- 동 대책 내용을 기반으로 중기부 - 지자체 간 협의·조정을 통해 별도의 「주력산업 개편(안)」 마련 ('20.12월)

- 지역주력산업 개편의 상세내용과 기업지원 방안을 포함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위원회 심의·확정 (연내)

* '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 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반영

- 필요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개편방안*」 등 개별 정책과제별 후속 대책 마련·발표

*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를 통해 발표 예정

②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추진체계 마련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TP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연내)

- 필요시 한국판 뉴딜 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행안부)를 활용하여 정책과제 추진 및 지자체 협력 강화

③ 개별 정책과제 신속 추진 및 성과점검

- 개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지속

- 지자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 및 신규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 (기업간담회 등)

*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간담회 등 현장방문 ('20.12) 등